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장 경 섭**

◀ 요약 ▶

이 글은 한국의 사회재생산 체계가 갖는 가족주의적 성격을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 사회정책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최근 드러난 전방위적 사회재생산 위기를 개발자유주의의 과도한 가족의존성 혹은 가족착취성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귀결시킨 ‘위험가족’(risk family) 현상으로서 설명할 것이다. 사회재생산 위기는 구체적으로 물질 붕괴 및 인적 교란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추세들을 간략히 개념화하고 내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가 그동안의 개발자유주의 질서 및 이에 수반된 사회재생산 위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에 접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사민주의 복지체제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 글은 명료하게 설정된 특정 사안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나 이론적 논증을 하는 일반적 성격의 논문이 아니고, 한국의 사회재생산 실태에 관련된

* 이 논문은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2011/5/27,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의 기초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 논평자로서 여러 귀중한 의견을 주신 이재경, 유석춘, 장혜경, 함인희 교수와 기고 논문에 대해 세밀하고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 크게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changks@snu.ac.kr)

다양한 사안과 추세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식의 틀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주제어: 사회재생산, 위험가족, 개발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빛 때문에 생활고를 겪어온 마흔 살 주부가 세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 자녀의 공책 6장에 … 부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정신적·금전적으로 힘들다. 우리가 없어도 잘 살 것으로 믿는다. 이런 식의 결별이 예의가 아님을 안다”는 내용의 글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생활고를 비판한 … 부인이 먼저 딸들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들 부부는 … 카드빚 6,000만 원 때문에 2005년 이혼한 뒤에도 월세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아왔지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2010/1/17)

치매(남편)와 암투병(부인)에 시달리던 노부부가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집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모(69)·노모(62)씨 부부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함께 사는 아들 부부와 손자를 제주도로 여행을 보낸 뒤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 아들은 여행지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모가 자살한 이유를 알고서는 한없이 통곡했다 (경향신문, 2011/5/9).

1. 서론: 체제과제로서의 사회재생산과 그 위기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언제나 대다수 시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삶의 틀이자 목적인 동시에 방송 드라마와 소설 같은 문화적 소비의 주종이고 국가의 다양한 사회·경제 정책의 영역이며 사회과학적 연구의 최대 소재 중 하나였다. 그런데 최근 ‘저출산·고령화’, ‘개인화’, ‘다문화화’, ‘복지시대’와 같은 21세기적 핵심 화두들의 기본 대상으로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학술적 관심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책영역으로 따지면 별도의 가족정책뿐 아니라 인구정책, 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농업(농민)정책, 여성·아

동·노인 정책 등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영역들이 사회정책 범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가족에 대한 이처럼 공통적인 관심은 바로 한국의 사회정책이 나아가 한국인들의 삶 자체가 그만큼 가족중심적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최근 가족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학술적 관심이 동시다발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것은 이러한 가족중심적 시민생활과 정책구도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위기의 극복이 사회·경제적 개혁의 중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필자는 이처럼 가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정책적, 사회적, 학술적 노력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으로서 ‘사회재생산’(social reproduction) 체제의 총체적 교란과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근 개발주의 국정에 대한 사회전반적 회의감에 바탕을 두고 강조되고 있는 복지국가 확립에 관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사회재생산을 둘러싼 가족-국가 분업체계의 근본적 재편이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기조의 차원에서 필자가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라고 설명해 온 한국 사회정책의 개발주의적 종속과 왜곡을 극복하고 사회정책이 독립적 가치와 기능을 확립하여 민주주의와 국민경제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정치이론적으로는 포괄적인 사회재생산이 터너(Turner, 2011) 교수가 지적하는 “공헌적 권리”(contributory rights)로서의 시민권(citizenship rights)임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복지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사회연대적 발전’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달성되어야함을 뜻한다.

이 글은 한국의 사회재생산 체계가 갖는 가족주의적 성격을 개발자유주의 사회정책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최근 드러난 전방위적 사회재생산 위기를 개발자유주의의 과도한 가족의존성 혹은 가족착취성이 신자유주의와 결합해 귀결시킨 ‘위험가족’(risk family) 현상으로서 설명할 것이다. 사회재생산 위기는 구체적으로 물질 붕괴 및 인적 교란의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추세들을 간략히 개념화하고 내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한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의가 그동안의 개발자유주의 질서 및 이에 수반된 사회재생산 위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에 접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시민주의 복지체제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 글은 명료하게 설정된 특정 사안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나 이론적 논증을 하는 일반적 성격의 논문이 아니고, 한국의 사회재생산 실태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과 추세들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인식의 틀을 제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¹⁾

2.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가족주의체제의 부침

2-1. 사회재생산 체제의 다양성

사람들이 부양·살림 능력을 갖추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본인이나 자녀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수발하는 일련의 활동은 주로 가족을 매개로 한 사회재생산 활동이다(Laslett and Brenner, 1989).²⁾ 이를 통해 가족, 기업, 사회공동체, 경제, 국가 등은 장·단기적 존속과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인 구성원의 확보, 유지,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³⁾ 그리고 인구의 증감, 노동력의 양적·질적 변화, 공동체 구성원의 충원 등은 이러한 사회재생산 활동의 집합적 결과이다. 자본주의는 흔히 생산체제의 조직적 원리를 중심으로 정의되지만 기업이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원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재생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체제들은 생산과 재생산을 각각 그리고 상호연관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왔으며, 한국은 이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특한 사례에 해당한다.

구미의 초기 자본주의 산업화 시대의 이른바 자유주의 정책기조 하에서 노동자들의 사회재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확립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

1) 이러한 틀 속에서 필자는 아래에 다뤄질 사회재생산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관해 종합적 분석서를 준비하고 있다. ‘개발자유주의’, ‘위험가족’ 등의 개념은 필자가 한국적 사회현상들의 ‘발현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안한 것이며, 기성의 체계적 이론들에서 연역적으로 도출되거나 관련된 사회·정치적 주체들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적 용도는 제한적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회재생산 위기의 실태는 종합적으로 위험가족 현상을 구성하며 이것이 개발자유주의의 부분적 표현이며 또한 그 정치경제적 배경에 개발자유주의가 노정되어 있다는 정도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2) 맑스는 *German Ideology*에서 (사회)재생산을 생산과 함께 인류역사의 두 동인이라고 지적했다(Marx and Engels, 1970).

3) 미국과 같은 극단적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재생산 활동의 ‘사회적’ 성격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인구(생물)학적 의미의 재생산, 즉 출산만을 ‘reproduction’으로 개념화한다.

과 투쟁이 소요되었다. 동즐로(Donzelot, 1979)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일종의 ‘사회재생산 가족(책임)주의’로 규정할 수도 있는 사회체계가 이념적으로 자리 잡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점차 체계화·보편화되었던 과정을 “가족 사찰”(policing families)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체계적으로 논의했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된 사회재생산 가족주의는 오늘날에는 미국 및 남유럽 후발자본주의 사회들의 사회정책 기조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을 내세운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재생산을 별도의 정치·정책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생산체제에 복속시켜 인민들의 생산에 대한 보편적·평등적 참여가 사회재생산의 자동 실현을 가져오도록 생산체제를 조직화하는 데 주력했으며 특히 여성들의 보편적 생산노동을 보장(강제)하기 위해 생산단위나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시도했다.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생산체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유지하는 대신 사회재생산 영역의 공적 지원과 관리에 주력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재생산 전반의 사회적 보장과 관리를 ‘개인별’ 사회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사회재생산의 사회화 혹은 탈가족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로 간주된다.⁴⁾ 반면 대륙유럽 국가들은 가장의 생산활동(노동)에 연계된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상당 부분 (가부장적) 가족에 매개해서 사회재생산의 제반 조건들을 안정화시켜 나갔다.⁵⁾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 후발 자본주의 사회들은 대체적으로 평가해 제도적으로는 불완전하나마 대륙유럽의 보수주의 모형을, 실질적으로는 미국식 자유주의 모형을 따라 사회재생산을 관리해 왔으며, 이념적으로는 각자의 토착적 가족이념을 적극적으로 접목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사회재생산 체제가 20세기 후반부터 심각한 지속가능성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IMF 경제위기’ 직후부터 심각한 사회재생산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Chang, 2010a; Ochiai, 2011)

2-2.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개발자유주의’(developmental liberalism)는 한국 등에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4) 이에 관련된 사회현상으로 법적 혼인의 급감, 혼외 출산의 급증 등이 복지국가의 가족해체 증후군이라고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는 가족주의 사회재생산을 고집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의 자기옹호적 비판일 수 있다.

5) 이에 비해 남유럽 국가들은 ‘가족에 의존한’ 사회재생산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이 추진되는 가운데 등장한 이른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사회정책 영역에서 드러낸 개발주의와 자유주의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필자가 제기한 개념으로서, 사회재생산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포함한다. 그리고 한국적 맥락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정책의 등장 및 이에 따른 사회재생산의 교란도 개발자유주의 역사라는 배경을 체계적으로 감안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재생산의 본격적 사회화를 통한 복지국가 시대의 확립도 개발자유주의의 유제를 철저히 극복하는 정지 작업을 전제로 한다. 필자는 별도의 논문에서 개발자유주의의 핵심적 특징으로 다음을 제시했다(Chang, 2011a).

- [1] 사회정책의 탈정치화, 기술관료화, 개발주의적 착종: 사회정책 사안들을 정치적 지배나 경쟁에 있어 중심적 혹은 독립적 안건으로서 내세우지 않고 대신 관련 행정조직을 통해 선진국들의 제도와 경험을 참고하여 경제개발에 부담을 주지 않거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나아가 (교육, 노동 정책 등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정책의 인식과 설정 자체를 개발주의적 혹은 준경제정책적으로 한다.⁶⁾
- [2] 사회정책 대상 주체들의 개발주의적 포섭: 성인 노동연령 인구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사회집단들을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적 보호 대상으로서 인정하는 걸 거부하고, 대신 경제개발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시켜 일종의 ‘개발시민’(developmental citizen)으로서 경제적 보상이나 혜택을 추구하도록 유도해 왔다.⁷⁾ 이는 각종 선거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이익을 포함한) 경제개발 의제의 압도적 비중으로 이어졌다.
- [3] 국가-자본의 기업(가)적 결합과 국가의 노자관계에 대한 직접적 개입: 자본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압축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는 필요에 따라 직접 생산기업을 설립·운영하기도 했지만 주로 기존 기업가들을 동원·지원하여 시기

6)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사회정책 부처가 분명한 사회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회문제의 정치적 폭발성이나 주무 장관의 특별한 정치적 입지와 의지 같은 여러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며, 실무 관료조직은 준정당적 차원의 정치적 정치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7) 필자는 이런 차원에서 박정희 시대 이후 사회적 시민권 대신에 일종의 ‘개발시민권’(developmental citizenship)을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져 왔으며 (Chang, 2011b), 이명박 정부는 ‘IMF 경제위기’ 이후 붕괴 일로의 개발시민권을 대중적으로 복원시킨다는 명분으로 집권했으나 오히려 그 역방향의 대기업 편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되었다고 본다 (Chang, 2012).

별로 특정 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기업들을 국가의 핵심적 ‘개발도구’(developmental instrument)로서 인식하여 이들의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반노동적인) 개입을 해 왔으며 명시적 노동정책도 국가의 이러한 계급(자본)적 입장에 종속되어 왔다.⁸⁾

[4] 사회적 시민권의 가족주의적 재설정: 헌법적으로도 선언되어 있는 사회적 시민권이 실제 보편주의적 사회보장 원칙에 의해 구체화되지 못했으며, 특히 스스로 안정적 고용을 통한 소득확보와 사회보장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집단들(예컨대, 노인, 아동, 청소년, 미혼모, 장애인 등)에 대해 핵가족을 넘어 확대(직계)가족적 부양·보호 의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면하는 전략이 지속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서민가정 중년여성들이 임노동, 보호노동, 일상가사의 중첩적 수행을 통해 극한적 생활경험을 해 왔다.

[5] 복지다원주의와 시민권 부정: 가족적 자기 부양·보호를 통해 관리할 수 없는 사회집단들에 관련된 보호(수용)제도나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도 국가는 공공 책임의 최소화 원칙을 견지하고 가능한 모든 민간 행위자들을 동원하려고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민간 행위자들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리적 동기나 행위를 공공연히 용인하거나 비호하는 일이 잦았다. 심지어 피수용자들의 노동착취, 인격·신체적 확대, 종교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도 인권이나 시민권 훼손 차원에서 대처하기보다는 사적 시혜관계의 일상적 부작용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았다.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해서는 준경제정책적 관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른바 “병원재벌”, “사학재벌”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개발자유주의의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사회재생산 체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재생산 관련 속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면들이 관찰된

⁸⁾ 노사분규 현장에서 한국 경찰이 ‘구사대’(救社隊)적 개입을 하거나 아예 민간(불법) 구사대와 공동작전에 나서기도 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는 사법행위라기보다는 차라리 ‘경제정책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개발시대를 경험한 간부 경찰들의 반노동계급적 아비투스(habitus)를 형성하는 것 같다.(이명박 정부 초기에 용산에서 소수 민간인 농성자를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 공중 투입과 같은 특공작전을 펼쳤던 기이한 현상은 윤리적·정치적 판단을 넘어 관련 경찰 조직이나 지휘자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특별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다.⁹⁾ [1] 농업(농촌),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드러났듯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부문들에 관해서는 사회재생산 필요성의 인지 자체를 거부하고 특정 산업의 생산(성장) 극대화에 모든 공적·사적 자원의 투입을 유도한다. [2] 사회재생산의 책임과 비용을 최대한 노동자 자신 혹은 가족에게 전가하며, 대신 필요에 따라 (공적 수당이 아닌) 금융적 지원을 한다.¹⁰⁾ [3] 주택, 의료, 교육 부문 등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재생산재’(social reproduction goods)의 실질적 시장상품화를 방조하거나 용인한다. [4] 교육부문 등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재생산의 내용을 경제개발 전략에 부합되도록 인위적으로 유도하거나 조작한다. 이러한 세부적 특징들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개발자유주의는 생산-재생산 관계에 있어 생산 극대화를 위한 재생산의 종속, 희생, 왜곡, 변형을 구조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개발자유주의 국가의 사회재생산에 대한 이러한 소극적 혹은 보수적 대처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경제·사회적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으며, 적어도 잠재적으로 정치적 불안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¹¹⁾ 특히 가족간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격차가 사회재생산 실현의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경쟁에서의 불평등성이 증폭되는 문제가 있다.¹²⁾ 그러나 대다수 한국인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수반된 전반적 소득 향상에 힘입어 각자의 가족 책임으로서의 사회재생산에 충실했으며, 나아가 국가의 개발(자유)주의에 저항을 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개발주의적으로 영위함으로써 보수적 정치경제 질서에 나름의 방식으로 능동적(?) 대처를 해 왔다. 예컨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강도가 단연 세계 최고이며, 자녀나 형제의 경제활동 관련 금전지원이 보편화되어 있고 (심지어 금융기관에서조차 연대보증 제도를 통해 이를 강요해 왔으며), 농업과 같은 사양 부문에서 미련 없이 발을 빼는 대신 형제나 자녀의 교육·훈련에 투자해 새로운 유망산업 진출을 꾀했고, 아예 (주

⁹⁾ 이 글의 이론적 성격으로 인해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의 관계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아래에 제시하는 다양한 사회재생산 위기 증후군과 그 정치경제적 맥락은 추후에 이러한 이론적 작업의 바탕이 될 것이다.

¹⁰⁾ 아래에 지적하듯이, 주택 (주택담보 대출), 교육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하여 일종의 ‘사회재생산 대출’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¹¹⁾ 예컨대, 주택, 교육 등은 줄곧 심각한 정치의제로 대두되었는데, 이 현상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¹²⁾ 이는 미국 같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도 체제의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지양되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며, 예컨대 초·중·고 교육의 무상 제공, 대학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장학제도 마련 등을 통해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한국에서 초·중·고 교육의 평준화 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택과 같은) 사회재생산재의 희소성에 편승한 투기소득 획득에 나서는 행태가 보편화되 다시피 했다.¹³⁾ 반면 노후생활 대비와 같은 사회재생산의 장기적 안정화에 대해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근자에 들어 노인인구의 절대빈곤이 보편화되는 참상이 전개되고 있다. ‘개발주의 국가’와 ‘개발주의 가족’이 연합해서 도박성이 농후한 사회재생산 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다.¹⁴⁾ 가족이 국가처럼 (거시적) 개발주의 자체에 본원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기초한 행위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거시적 체제질서를 미시적으로 전폭 내면화하고 이에 수반된 기회구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개별적 삶을 적응시켜 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발주의 체제질서의 기초단위로서 작용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주의 가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2-3. 신자유주의의 영향: ‘위험가족’ 시대의 도래

한국은 자유주의 경제·사회 체제의 사민주의적 혹은 케인주의적 수정을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가 기존 체제의 근본적 단절이나 변화를 의미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개발주의적인 변형이 가해진 한국의 자유주의, 즉 개발자유주의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해 사회정책, 노자관계 등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노태우 정부는 집권 초기의 가공할 정치·사회적 압력에 직면해 ‘복지국가’ 확립을 정치적 구호로 내걸고 실제 사회복지 지출을 상당히 확대하고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노자관계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반노동적 개입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불안을 느낀 재벌과 정부 내 개발관료, 보수적 사법·언론 엘리트 등은 정치권과 독립된 새로운 개발주의 연대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무장해제와 기업의 무한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투사된) 구미의 신자유주의는 이들 신개발연대의 기본 이념으로서 열렬히 수용되었다 (Chang, 2011a).¹⁵⁾

13) 이러한 사회재생산재에 대한 투기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엘리트층의 관련 행위에 대한 비판적 사회분위기는 국가 고위직 임명시 상당히 심각하게 반영된다.

14) 일본의 베네세차세대육성연구소가 아시아 주요 5개 도시(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타이페이)에서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 6,245명의 육아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녀 미래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서울 부모의 비율이 다른 도시의 부모들보다 최소 4배 이상 높았다 (한국일보, 2011/5/19). 또한 자신에 삶에 대한 자녀의 가치를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휘에 두는 비율 역시 서울 부모들 사이에서 유난히 높았다.

반복지국가적 이념체계로서의 신자유주의는 사회재생산에 대해서도 직접적·전면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지만 한국적 맥락에서는 우선 사회재생산의 사회화를 내포한 복지국가적 전환을 정치·사회적으로 미리 가로막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 예컨대, 한국에서 복지국가 확립 담론이 본격화됨과 거의 동시에 복지국가의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관한 담론이 급속히 확산되었다.¹⁵⁾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발자유주의의 유제로서 사회재생산의 가족책임성 및 개발지향성이 온존한 상태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는 아예 경제 전반의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전개됨으로써 사회재생산의 기본적인 물적 조건과 전제가 와해된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중산층 관리직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였던 고용시장의 충격이 실질적으로는 아래로 집중 전달됨으로써 노무직, 개인서비스, 자영업 등에 종사하던 서민층의 집단적 생계위기가 초래되었고 흔히 “가족해체”로 묘사되는 사회재생산 체제의 와해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Chang, 2002). 또한 수많은 중산층 가정에서 계급적 상징이었던 남성가장 노동자의 안정적 ‘가족생계임금’(family subsistence wage)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부인 취업이나 가족단위 자영업이 빠르게 늘어났으며, 이는 여성의존적 사회재생산 체제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혼, 가출, 폭력, 자살 등 통상적 가족해체 지표들이 일시에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게 악화되는 가운데 가족주의자 한국인들의 가족은 사회재생산의 근본적 교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지향에 있어 가족(중심)주의는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해석함에 있어,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관한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설명이 원용할 가치가 크다. 벡은 범세계적 반항을 일으킨 “위험사회”(risk society)론을 통해 후기 산업자본주의 사회들이 “반영적 근대화”(reflexive mod-

15) 이 시기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재벌의 경제연구소들이 한국의 경제·사회적 현실과 미래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맡았으며, 보수 신문들이 이들의 주장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창구 역할을 맡았다. 사기업에 소속되었거나 자체가 사기업인 연구소들이 내놓는 주장들이 한국처럼 주요 매체의 일상적 핵심 뉴스거리가 되는 사회는 흔치 않다.

16) 필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복지 정책·제도의 확충을 권고하기 위한 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초안이 복지국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한 적이 있다.

ernization)라는 자기추동적 과정으로 인해 통제 불능의 사회·경제·생태적 위험을 구조적으로 누적시켜 왔다고 역설했으며 (Beck, 1992), 근자에는 이러한 과정이 범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점을 주목해 “세계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론으로 논의를 확장해 왔다 (Beck, 1999).¹⁷⁾ 벡은 아울러 “이차근대성”(second modernity)론을 통해 위험사회의 사회체제적 성격을 구체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Beck and Grande, 2010), 이 논의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해 보이지만 (필자의 해석으로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본과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자기확장의 격랑에 종속된 각 사회의 “일차근대”적 사회제도들, 즉 산업경제, 노동시장, 교육제도, 복지체제, 정당정치, 심지어 가족제도까지 그동안 현대인들을 위해 수행해오던 기능을 더 이상 안정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현대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각자의 삶을 능동적·창의적으로 재구성하여 거시적 경제·사회·생태 질서의 교란에 대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주의화’가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 벡의 생각이다.

그동안 세계인이 팔목상대할 정도의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사회·정치적 근대화를 이룩했으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다시피 한 한국은 이러한 벡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적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초기 산업화를 포함한 ‘일차근대’적 상황이 개발자유주의적으로 추동되었고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역시 개발국가와 수출재벌의 연대에 의해 노동배제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사회재생산의 가족책임성과 개발지향성이 꾸준히 지속되어 온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위험사회 이상으로 ‘위험가족’(risk family)의 문제가 시민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국가정책이자 생활문화로서 가족주의는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체제의 형성과 강화로 귀결되었고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불안전성과 ‘초국가화’(transnationalization)에 따른 노동인구의 고용·소득 불안은 고스란히 가족 차원 사회재생산의 불안정화로 이어졌다. 이는 구체적으로 생계소비의 곤란에 따른 가족성원 전체의 고

¹⁷⁾ “Reflexive modernization”은 벡의 반영적 근대화론과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론에서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다만 벡의 논의에서는 근대화의 사회주체들이 스스로 설정하는 성찰성이 많은 경우 사회체계 혹은 사회체계간 관계 차원에서 작용하는 구조적 이해관계나 규정력의 반영이고, 기든스의 논의에서는 성찰성이 개인보다는 사회체계적 속성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논의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벡의 위험사회론은 이미 국내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와 관련해 많은 이론적·경험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필자는 한국이 후기산업사회적 위험사회일뿐 아니라 후진국형 및 한국특유형 위험인자들을 함께 포함한 ‘복합위험사회’(complex risk society)임을 설명한 바 있다 (장경섭, 1998).

통과 갈등,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부양·보호 실패, 학생 자녀를 위한 교육·생활비 제공 중단 등의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음을 뜻한다. 나아가 만성화된 청년층 고용불안은 그동안 개발주의적 동기에 의해 집중 투입된 자녀의 교육관련 지출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수많은 가족은 경제위기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현상으로서 청년실업, 만혼·비혼·이혼, 빈곤·유병 노인 급증이 초래한 가족부양 부담의 급증을 감내해야 할 처지에 있다.

흔히 “신사회위협”(Taylor-Gooby, 2004; Armingeon and Bonoli, 2006)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고난이 아니더라도 대다수 한국인의 가족은 필자가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으로 명명한 복합적이고 급격한 경제·사회·문화적 변동의 담지체로서 과잉 기능을 요구받아 이미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에 스트레스가 만성화된 상태에 있었다.¹⁸⁾

압축적 근대성이 가족중심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사회재생산 주체로서의 한국 가족은 엄청난 성취의 이면에 심각한 ‘기능적 과부하’(functional overloading)를 겪어야 했고, 이에 따른 집단적·개인적 고통이 한국인들의 삶에 점철되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 혹은 백이 규정하는 이차근대의 상황에서 수많은 가족은 한편으로 사회재생산의 물적 기반 교란을 겪으며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사회재생산 부담의 확대에 직면하는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백의 문제의식을 원용하면, 한국의 위험사회 중후군들이 집중적으로 가족에 체화됨으로서 일종의 ‘위험가족’(위험에 처한 가족)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 살펴보겠지만, 위험가족 시대에 가족관계가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의 전달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혼인·출산 동기의 급격한 약화를 비롯해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¹⁸⁾ 이와 관련해 필자가 별도의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인들의 가족중심주의는 가족이념의 다원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장경섭, 2009). 즉 한국인들은 유교적, 도구주의적, 서정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족이념이 동시에 체화된 가족문화유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적 다원성은 한편으로 가족이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기능적 요구를 수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화적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에 만성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복합적 기능 수행은 한국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functional overloading)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 체제도 이러한 가족이념의 다원성에 의해 문화적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사회 체제와 위험가족: 사회재생산의 물적 붕괴

위험가족 시대 한국의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 체제의 교란과 붕괴는 다양한 지역과 계급·계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개발자유주의의 주요 성격의 하나로 사회재생산 일반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책임이 최소화되었음을 지적했는데, 이에 덧붙여 경제개발의 핵심 전략으로서 지속적 산업구조 고도화와 무차별적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면서 농업, 여러 제조업 등이 순차적으로 용도 폐기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소속된 시민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재생산이 근본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거시적 경제·사회 체제의 불안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농가 재생산체제의 붕괴

가부장적 가족을 중심으로 생산체제와 재생산체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통적 가족농은 한국뿐 아니라 인류역사 전반에 걸쳐 가장 보편적 사회제도로 존재해 왔다 (Chayanov, 1986). 그런데 한국의 급속한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는 기간에 가족농이 거의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는 농민인구 비율이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일 뿐 아니라 그나마 농촌마을 대다수에 주로 노인들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그런데 가족재생산주기별 농가의 분포를 보면 가족농 사회재생산의 근본적 와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권태환·장경섭, 1995; 장경섭, 2009). 즉, 그나마 남아 있는 농가들 가운데 이른바 형성기와 확대기에 있는 비율은 매우 낮고 대다수 축소기와 해체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이 농촌의 생산 및 재생산의 기본조직으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족농의 소멸 추세는 전반적으로 도시 중심의 산업자본주의적 발전 과정에 농민들 스스로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 자녀·형제의 도시지역에서의 교육과 취업을 (개발주의) 가족전략 차원에서 적극 추구하면서 농가가 결과적으로 도시경제를 위한 사회재생산 조직으로 기능해 온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러한 적응적 행위는 국가와 산업자본이 연대한 ‘물순환적’ 혹은 ‘전방돌진적’ 경제개발 방식에 종속된 일종의 패배주의의 반영이기도 하다. 농업, 농촌, 농민의 존재와

기능이 갖는 경제·사회·문화·생태적 차원의 복합적 가치는 무시하고, 수출 산업재벌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농업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굳이 숨기지 않는 국가 앞에서 대다수 농민들은 계급적 저항보다는 개별적 투항을 한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투항은 농가의 가부장적 생산·재생산 체제의 중압감을 벗어나려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져, 농촌 남성들의 혼인 위기를 초래했다(김주숙, 1994; 장경섭, 2009).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는, (전형적 개발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경제개발적 가치를 상실한 농촌과 농민에 대해 굳이 많은 사회재생산 관련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며, 다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 지방정부의 존립근거 확보 차원의 사회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약간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수출재벌의 배타적 이익을 중심으로 국가적 경제 발전을 정의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농업강국들과의 무차별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시해 농업 희생(포기)적 경제정책이 더욱 극단화되었다. 그리고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에서, 잔류 농가들의 사회재생산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인근 빈곤국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신부 수입?)이 급증하는 역설이 전개되고 있다(Kim, 2011).

노동생애와 사회재생산

전방돌진적 경제개발 전략은 대다수 도시 산업노동자의 사회재생산도 구조적으로 교란시켜 왔다. 이미 널리 확인된 사실이지만 한국 기업들에 있어 종신고용이란 극소수 노동자들에 대한 예외적 혜택이었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노동생애’(working life history)는 잦은 단절과 부문적 복잡성이 지배했다(최선영·장경섭, 2011). 산업화 초기에 저임에 근거한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동자 착취 과정에서 생산노동직은 노동자들 스스로에게도 이상적인 평생직업이 되지 못했다(Koo, 2001). 이후 일부 수출재벌 중심으로 급속히 전개된 산업구조 고도화도 기존 노동자들의 기술적 숙련성 제고에 기초한 ‘생산공동체적 진화’라기보다는 기술적 외부조달을 전제한 재창업적 사업전환의 성격이 강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기술적 전환과 자동화에 의해 오히려 도태되는 비극에 직면했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아예 기술수준에 무관하게 산업노동자들을 정규적으로는 고용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기업들에 만연해 있다. (독일, 일본 등의 모범적 사례와는 판이하게) 산업적 진보가 노동자들의 인적자원

(human capital)으로 체화되지 않는 산업체제를 고수한 상태에서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 권 경제로 도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시사적이다(Kong, 2011). 그리고 산업정책에 근본적으로 종속된 노동정책은 개발자유주의적 입장을 반영해 기업(수출재벌) 차원의 직접적·명시적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한 기성 노동자들 자체에 대한 일반적 인적 자본 보강책을 강구하지는 않았다.¹⁹⁾ 대다수 산업노동자들의 이러한 노동생애적 단절은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임금 문제와 결부되어,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되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직업으로서의 산업노동자가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인적으로 체현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직업을 가족 내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하려는 의지를 담은 사회재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한 자동차 기업에서 노조원들이 자신의 정규직 지위를 자녀들에게 세습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흥미로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 2011/4/14).

도시빈곤가족과 여성

위에서 가족농이 생산과 재생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체제라고 지적했는데, 도시 서민 가족 대다수에서 부인들 개인이 마찬가지로의 결합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최근 고학력 전문직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평생취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인 취업은 도시서민층의 계급적 특징이었다. 중년층 이상의 취업부인은 상당수가 결혼 전 취업했다가 결혼 직후 출산·육아 기간에 일시 퇴직했다가 다시 취업하는 이른바 ‘M자형 노동생애’를 통해 가족의 사회재생산 및 소득유지를 도모해 왔다(장경섭, 2009). 그런데 교육·계층적 내혼(內婚)경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배우자들은 대체로 불안정·저소득 직종에 집중되었고 자신들의 직업 역시 임시서비스직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맞벌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나아가 (교육투자 등에 기초한) 자녀를 통한 세대간 계층상승도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다.²⁰⁾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고착화되었다. 도시서민층 부인의 삶은 언제나 투쟁

¹⁹⁾ 다만 ‘IMF 경제위기’를 맞아 대량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미봉적 수준의 기술 재교육 지원 정책이 갑자기 추진되었었다 (Chang, 2002).

²⁰⁾ 이들 배우자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사노동 참여율도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장경섭, 2009).

적 헌신을 요하는 것이었지만, 최근 이른바 “신사회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개인적 고통이 급증하고 다양한 가족해체 경험을 겪게 되었다 (윤홍식, 2008). 압축적 고통화에 수반된 빈곤·유병 노인의 급증, 청년층 고용불안 및 보편적 고학력화에 따른 자녀부양(교육) 부담의 확대, 탈산업화·경제개방화·금융위기 등에 따른 배우자의 만성적 고용불안 등이 이들의 생계부양자 및 가정내 보호(‘돌봄’)노동자로서의 역할부담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²¹⁾ 이 가운데 특히 성년 자녀의 고용불안 및 이에 수반한 만혼·비혼·이혼의 급증은 중장년 부인들이 과거 같으면 자녀 세대로의 역할 이전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여유와 보람을 더 이상 쉽게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계급으로서의 금융채무자: 사회재생산의 금융화

과거 농경사회에서 토지 소유구조의 왜곡으로 농민들의 정상적 경제활동 기회가 박탈되고 빈곤이 확산되면 상당수가 지주계급의 고리대에 의존하게 되고 중국에 상황이 어렵게 되면 결국 생산·재생산수단(토지, 가옥, 가축, 가재도구)을 처분하고 심지어 가족인신(자녀, 부인)을 내어주는 궁지에 몰리곤 했다. 이는 농민들이 ‘빈곤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poverty) 과정을 거쳐 결국 가족·개인 차원의 파멸을 겪었음을 의미한다.²²⁾ 수년전부터 정부 차원에서조차 명시적으로 위기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계(개인)부채의 폭증은 마찬가지로 서민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수반한 빈곤의 금융화를 의미하며,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으로 인해 가족·개인 차원에서 끔찍한 내용의 핍박을 겪고 결국 가족해체, 자살 등의 파국을 맞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Chang, 2010b).²³⁾ (현재 한국의 소득수준 대비 평균 가계부채 수준은 그동안 단연 최고였던 미국을 훨씬 뛰어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수출재벌 중심의 급진적 경제구조 재편은 몇몇 대기업의 ‘경제활동 기회 극대화’를 위해 농업 및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희생, 산업노동 기회의 해외 이전 등을 초래했으며, 경제활동 기회를 박탈당한 수많은 한국인들은 상실된 노동·사업 소득을 가족자산 처분, 친족간 재정지원·대출보증, 소비자대출 등을 통해 보충해야

21) 최근 학계, 정부(여성가족부), 정책연구기관의 적극적 협력 속에서 기혼여성의 ‘돌봄노동자’로서의 기능과 고통에 관한 실태연구와 정책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장혜경 외, 2006; 마경희, 2005).

22) 최근 세계 전역에 걸친 경제·사회적 전방위 금융화 추세에 관해 벤 파인의 논문(Fine, 2011) 참조.

23) 가계부채 급증은 부분적으로는 중산층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와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제구조 급변으로 정상적 노동·사업소득 획득이 여의치 않게 되어 부동산 투기소득으로도 벌충하려는 동기가 중산층 사이에 확산된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한 개발정책적 동기를 바탕으로 갖가지 금융(대출)상품의 개발과 금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용인하였으며, 특히 (카드론을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과 주택담보대출이 200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의 최소한 사회재생산에 필요한 물질 자원이 생산활동이 아니라 금융수단에 의해 조달됨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회재생산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social reproduction)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채상환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렵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더라도 고용주나 거래상대자와의 관계에 정상적 협상력을 갖고 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경제활동을 하기 쉽다. 심지어 채권자(사채업자)가 이를 악용해 노예노동적 성격의 경제활동을 직접 요구하거나 장기매매까지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금융채무가 생산활동에 있어 별도의 계급적 지위를 구성하는 구조적 조건이 되는 셈이며, 이는 특히 유흥산업의 팽창에 직결되어 있다. 채무자 지위가 국민에게 보편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현 정부는 여러 유형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상해 제공하려고 시도해 왔다. 미소 금융 등 생산활동 지원 소액금융제도도 흥미롭지만, 학자금대출, 전세금대출 등에서 드러나듯이 교육, 주거 등 기본적 사회재생산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사회재생산 금융제도’가 확충된 것이 시사적이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폭등 방지, 부동산 개발·투기 이익 보호 등 사회재생산재 공급 차원의 경제적 왜곡은 방조하면서, 이에 따른 서민들의 사회재생산재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제도가 본질적으로 사회정책인지 경제정책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들 사회재생산 대출제도의 이자율 수준을 보면 결코 공적 보조금 지원의 성격은 없으며, 차라리 금융부문에 대한 개발국가적 산업발전 정책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4. 인구동태와 위험가족: 사회재생산의 인적 교란

이른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정권 교체시마다 반복되는 총체적 정책 뒤엎기를 비껴갈 정도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받고 있다. 위험가족 시대의 직접적 표현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다투고 조만간 인구감소 시대의 도

래를 필연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빈곤·유병 노년기를 보편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노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근경에 처하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개발자유주의 국가에 기대어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일부 중산층이 자녀 조기유학과 원정출산을 감행하며 많은 농민들이 외국인신부와의 혼인에 나서지만, 이들의 사회재생산 자구책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론 자신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근본적인 효과를 가질지는 미지수다.

위험회피 개인화와 초저출산

지난 세기말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을 막연히 미루거나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최소화(最少化)하고, 적극적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선택하는 등의 추세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 급격한 초혼 연령 상승 등의 추세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장경섭, 2011).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는 사회재생산과 관련된 가족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심각한 부담을 갖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사회재생산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감을 갖는 인구의 급증이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젊은 세대가 가족주의를 포기하거나 나아가 새롭게 개인주의를 공고화시키는 사회문화적 변동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필자는 별도의 논문에서 이를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라고 설명했다 (Chang and Song, 2010). 세대를 막론하고 사회재생산의 가족중심주의는 여전히 강고해서, 청년층 대다수가 궁극적인 혼인 및 혼인 후 출산 의사가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격랑이 이러한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의 물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대다수 청년 남녀가 ‘위험회피’(risk aversion)적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²⁴⁾ (다른 한편으로 가족질서 및 양성관계의 민주화, 여성 경제활동 기회의 확대 등에 힘입어 갈수록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 사회진출을 꾀하고 개인적으로는 결혼과 출산 압력에 대항하고 있다.) 가족관계가 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 못지않게 사회적 위험을 전달시킬 가능성이 갈수록 농후해지는 현실에서, 가족중

²⁴⁾ 이러한 추세는 결혼, 출산뿐 아니라 사회적 교호작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물질적 자원의 빈곤이 사회적 교류·지원망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고독사’(孤獨死), 즉 독거자(獨居者)들이 주변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후 상당 기간 방치되는 일이 빈곤층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1/6/21).

심적 사회재생산의 동반자(배우자) 및 계승자(자녀) 확보에 대한 동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어 있다.²⁵⁾ 그리고 그 집합적 결과로서의 혼인을 및 출산을 저하, 인구연령구조 고령화는 거시적 사회·경제 체제 유지에 심각한 교란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 전망을 내세운 개발자유주의 국가의 출산촉진(pro-natal) 인구정책 담론이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출산동기를 더욱 약화시키는 조짐이 보인다.

확장핵가족, 역직계가족, 세대간 부양관계

구조적·보편적 고용불안에 직면한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재생산의 물적 조건의 악화는 이들의 혼인과 출산을 위축시키는 데 머물지 않고 부모 세대에 대한 의존을 장기화시켜 결국 모든 세대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게 만들고 있다. 과거 기준으로는 성년기인 자녀가 혼인과 출산을 통해 스스로의 ‘핵가족’을 구성하기보다는 중·노년 부모에 장기간 주거와 생활을 의존하여 핵가족적 의존관계를 연장함으로써 일종의 ‘확장핵가족’(extended nuclear family)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나아가 이들 세대가 설사 혼인을 하더라도 주거, 육아, 생활 차원에서 중·노년 부모에 대한 의존을 지속함으로써 과거의 직계가족과는 세대간 부양관계가 역전된 일종의 ‘역직계가족’(reverse stem family)도 급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처럼 물질적 차원에서 초래된 확장핵가족과 역직계가족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차원에서는 (자녀세대) 핵가족의 당위성이 보편화되고 있다. 자녀 자신이나 부모 모두에게 노년기 부모에 대한 동거부양이라는 직계가족 규범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혼인 및 출산은 자녀의 개인적 삶의 개척과 관리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사실 이러한 가족규범과 가족형태 사이의 괴리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60-70년대에 본격화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농가 출신 자녀들은 도시에서의 새로운 경제·사회적 기회를 바탕으로 핵가족을 형성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나 규범적으로는 농촌의 부모와 직계가족적인 관계를 상당 기간 지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은 당연시되었을 뿐 아니라 결혼 시기와 배우자 선

25) 범세계적 영향력을 가졌던 칼드웰(Caldwell, 1982)의 출산력 전환 이론은 “세대간 부의 흐름”(intergenerational wealth flows)의 방향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21세기 한국 상황은 갈수록 ‘세대간 위험의 흐름’(intergenerational risk flows)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26) ‘확장핵가족’과 아래의 ‘역직계가족’은 필자가 가족구조의 격변을 다루기 위해 새롭게 제시하는 개념이다.

택에 있어 부모의 의중이 긴밀히 작용하였고, 출산 역시 필수적이었을 뿐 아니라 부모의 남아선호 규범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혼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절대로 삼가야 할 일이었다. 이러한 규범적 직계가족-물질적 핵가족 질서가 규범적 핵가족-물질적 확장핵가족·역직계가족 질서로 전환하게 된 것은 불과 한 세대 남짓한 기간을 필요로 했으며, 이 역시 한국사회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이 사회적 진화나 적응의 결과라기보다는 개발자유주의의 폐해 위에 경제위기 및 급진적인 신자유주의화의 충격이 중첩된 상황에서 나타난 사적 미봉책들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확장핵가족과 역직계가족의 확산은 곧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 체제의 다음 단계(세대)로의 승계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중지됨을 의미하며, 이 와중에 중·장년 부인들이 과거 같으면 다음 세대로의 역할 이전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여유와 보람을 집단적으로 상실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²⁷⁾

제2차 고령화: 보편적 생활양식으로서의 노년빈곤

얼마 전 병마에 시달리던 한 노부부가 자신들을 극진히 보살피던 아들 내외에 미안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향신문, 2011/5/9). 반면 그동안 헌신적으로 양육·교육·지원했던 자녀들이 자신들을 봉양하지 않는다며 부양비를 받아내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노인들의 경우도 애처롭기는 마찬가지이다. ‘압축적 고령화’(장정섭, 2009) 과정에서 나름대로 보람있고 활동적인 (이른바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도 많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일상생활을 통해 체험하며 연명하고 있다(최현수, 2003).²⁸⁾ 사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21세기에 처음 맞는 현상이 아니다. 다른 수많은 사회들과 함께 한국은 20세기에 이미 평균수명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했었다.²⁹⁾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상대적) 고령인구는 같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전개된 산업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연장된 (상대적) 노년

²⁷⁾ 2011년 연초에 소개된 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상식(?) 혹은 다른 사회들 상황과는 달리 한국 여성들의 경우 중년기에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특별히 높았다(조선일보, 2011/1/14).

²⁸⁾ 아울러 노인인구내 소득·자산 불평등 정도도 다른 연령층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손병돈, 2009).

²⁹⁾ 예컨대, 해방 직후 47세이던 평균수명은 1970년대 62세, 1980년대 66세 등으로 초기 산업화 시대까지 이미 20년 가까이 늘어났다(문화방송, 2008/8/29).

기 대부분을 보낼 수 있었다. 즉 매우 ‘생산적’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었던 것인데, 같은 세대(cohort)의 대다수가 현재 또 다른 단계의 고령화, 즉 ‘제2차 고령화’를 거치면서 이들 가운데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는 노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³⁰⁾ 노인빈곤은 이들이 ‘생산적’이었던 기간 동안에 충분한 노후대비, 즉 노년기 사회재생산 비용 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까지 나서 강요한 저임·저급가를 감내하며 이조차 자녀교육 등 ‘하향적’ 사회재생산에 대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런 맥락에서 빈곤 속에서도 많은 노인들은 자녀를 “대학까지 마쳐” 독립시킨 사실을 곱씹으며 산다. 문제는 국가마저 개발자유주의 입장에서 “선성장, 후분배”라는 결국 지켜지지도 않을 정책논리를 내세우며 이들의 노후에 대한 집단적·체계적 대책 마련을 막연히 미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노년기는 본격적 탈산업화에 맞물려 더 이상 주류 생산체제 내로 흡수될 수가 없으며, 확실한 고정소득의 기여로 개인적으로 안정된 사회재생산을 실현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미국, 일본의 연금수급 노인들처럼) ‘소비시민’(consumer citizen)으로서의 뚜렷한 지위를 갖기도 어렵다. 결국 많은 노인들의 삶은 자녀 가족의 사회재생산 체제에 편입되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갖가지 혼란, 갈등, 빈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자녀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극도로 불안정해지고 자녀의 자녀, 즉 손자들이 구조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자녀 의존이란 사실상 계층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 자살률까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 아직 제2차 고령화의 여파가 본격화되기도 전의 일이고 보면, 사회체제 전체 차원에서의 획기적 대처가 필수불가결하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재생산으로서의 가족세계화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주로 기업(재벌) 혹은 생산체제 차원의 해외 수출시장 및 생산기반 확대와 아시아권 저임노동력 도입을 중심으로 추동되었지만, 일반 시민들 차원에서도 사회재생산 기반의 보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삶의 세계화가 전개되었다. 앞서 지적한 농가의 생산·가사 노동력으로서의 외국인 신부 영입, 자녀의 교육기회 증진을 위한 조기유학(기러기 아빠), 심지어 자녀의 선진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 등

³⁰⁾ ‘제2차 고령화’는 이러한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 필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개념이다.

의 현상은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사회재생산 체제의 보강 차원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중국, 베트남 등 저임 국가에 집중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반 확대 및 아시아 빈곤국들로부터의 저임 산업노동력 충원도 결국 노동력 사회재생산 비용의 부담 회피를 노린 전략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나 정부가 단기적 생산노동력 조달의 양적 측면에 치중하는 데 비해서, 중산층의 교육·출산 세계화는 (영구이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자녀의 장기적 사회재생산의 질적 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³¹⁾ 그리고 농촌 남성들의 (중국, 베트남 등) 특정 아시아 문화권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은 농가의 장·단기 사회재생산의 문화적(가부장적) 조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요컨대 개발국가가 수출재벌이라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경제적 세계화 과정에서 한편으로 농민, 도시노동자 등 대다수 한국인들의 생산체제적 지위 및 사회재생산 조건이 근본적으로 교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과 도시중산층의 사회재생산 체제 보강을 위한 혼인·교육 세계화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사회재생산 세계화는 갖가지 고통스러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와 도시중산층의 욕구를 전략적으로 만족시켜주는 효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미봉적 자구책이 앞서 살펴본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적 사회재생산 체제의 교란과 붕괴, 그리고 이에 수반할 거시적 경제·사회 체제의 위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5. 사회재생산 사회화와 복지국가

어떤 정치·경제 체제가 사회 전체 혹은 특정 산업·지역·계급의 사회재생산 체제에 대한 보호·지원을 거부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사회나 집단을 ‘활용후 폐기·방치가 무방한’(disposable)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구미(歐美)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가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이런 식으로 지배해 온 결과

³¹⁾ 사회재생산의 질적 측면에 관한 관심은 우선 출산율을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과거 가족계획사업의 구호인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논리가 바로 사회재생산의 ‘질적 제고’를 위해 ‘양적 제한’을 하자는 것이었다. 지금 한국인들의 태도는 ‘잘 키우기 힘들니, 낳지 말거나 하나로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는 사회재생산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역(negative)으로 반영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의 많은 사회들은 경제발전은커녕 기본적인 사회질서의 교란과 보편·만성화된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 일제시대 한국 농촌의 피폐상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여러 농촌마을들이나 도시 빈곤지역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인이 찬양할 수준의 급격한 산업자본주의적 발전의 이면에서 그동안의 엄청난 경제·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출재벌 중심의 경제세계화에 요긴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방치된 채 최소한의 사회재생산조차 힘겨운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신음하고 있다.³²⁾ 개발자유주의 국가(모든 집권정당 하에서) 이러한 과정을 억제하거나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굳이 곤경에 처한 기층 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더라도 한국의 위정자집단과 재벌이 식민자본가들처럼 ‘언젠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견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재생산 체제의 총체적 붕괴 조짐이 막연히 방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부터 여성 ‘보호노동’ 지원, ‘건전가정’ 만들기 캠페인, 농민 국제결혼 주선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가족관련 정책사업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 체제의 위기에 대한 대중요법으로서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가족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들 사업은 여기에서 살펴본 ‘위험가족시대’적 사회재생산의 물적·인적 붕괴 추세를 감안할 때 근본적 한계가 뚜렷하다.

요컨대, 서구 복지국가의 보수적 기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관리 차원에서 추진된 ‘사회재생산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social reproduction)’가 근자의 한국 상황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전환도 당장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금의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굳이 (에스핑-앤더슨 등이 제시한) 현존하는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 이러한 전환에 가장 부합되는 것을 찾자면,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Esping-Anderson, 1990).³³⁾ (영미식) 자유주의 체제는 개발자유주의의 폐해로서 사회재생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적합성은 물론 정당성도 갖기가 어려우며, (대륙유럽식) 보수주의 체제

³²⁾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출산이 이른바 ‘재생산파업’(reproduction strike)으로서 갖는 압박효과도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다. 적어도 주요 수출재벌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증거는 없다.

³³⁾ 윤홍식(2006)은 OECD 21개국 비교연구를 통해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의 복지체제가 가족의 사회재생산 부담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보완해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는 극도로 불안정해진 고용지위가 상당기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그림의 떡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회재생산의 사회화를 가장 충실히 실현했다고 여겨지며, 그 사회·경제적 강점이 최근 세계 경제위기에서 보여준 예외적인 안정성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겨레, 2011/5/19). 사회재생산의 사회화, 그리고 이에 관련한 복지국가적 전환은 정책적·사회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엄청난 정치적 실천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해, 광우병 촛불시위, 무상급식 물포 등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재생산에 관련한 정치주체로서의 자의의식을 확립한 시민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 참고문헌 □

- 권태환·장경섭 (1995). 한국 가족농 재생산체계의 위기: 가족주기별 분포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18(1): 1-39.
- 김주숙 (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서울: 한올아카데미.
- 마경희 (2005). 사회권으로서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여성과 사회* 16: 35-66.
- 손병돈 (2009). 노인 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요인분해. *한국노년학* 29(4): 1445-61.
- 윤홍식 (2006).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3): 341-370.
- 윤홍식 (2008). 신사회위험의 확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밑그림: 여성·가족(복지)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월간 복지동향* 113(2008/3): 23-27.
- 장경섭 (1998).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 한국비교사회학회 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비교사회, 2호)*, 373-414. 서울: 전통과 현대.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 장경섭 (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23(3).
-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 (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최선영·장경섭 (2011).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남성 종신고용체계의 허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최현수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경향신문 (www.khan.co.kr).
- 문화방송 (MBC).
- 조선일보 (www.chosun.com).
- 한겨레 (www.hani.co.kr).
- 한국일보 (www.hankooki.co.kr).
- Armingeon, Klaus, and Bonoli, Giuliano, eds. (2006).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o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London: Routledge.
- Beck, Ulrich ([1984]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eck, Ulrich (1999). *World Risk Society*. Cambridge: Polity.
- Beck, Ulrich, and Grande, Edgar (2010).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The cosmopolitan turn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09-443.
- Caldwell, John C. (1982). *Theory of Fertility Decline*. London: Academic Press.

- Chang Kyung-Sup (2002). South Korean society in the IMF era: Compressed capitalist development and social sustainability crisis. Pietro Masina, ed, *Rethinking Development in East Asia: From Illusory Miracle to Economic Crisis*, 189-222. London: Curzon.
- Chang, Kyung-Sup (2010a). *South Korea under Compressed Modernity: Familial Political Economy in Transi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Chang Kyung-Sup (2010b). Consumer credit instead of social wage? Jobless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financialization of poverty in post-crisis South Kore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Economics Associates (IDEAs) on "Reforming the financial system: Proposals, constraints and new directions", 25-27 January 2010, Muttukadu, Chennai, India.
- Chang Kyung-Sup (2011a). Predicaments of neoliberalism in the post-developmental liberal context." Chang Kyung-Sup, Fine, Ben, and Weiss, Linda, eds., *Developmental Politics in Transitio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 Basingstoke/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hang, Kyung-Sup (2011b). 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 Chang Kyung-Sup, and Turner, Bryan S.,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Chang, Kyung-Sup (2012). Economic development, democracy, and citizenship politics in South Korea: The predicament of developmental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16(1).
- Chang Kyung-Sup, and Song Min-You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40-565.
- Chayanov, Alexander V. ([1925] 1986). *Theory of the Peasant Econom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Donzelot, Jacques (1979). *The Policing of Families*. New York: Pantheon.
- Esping-Anderse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ne, Ben (2011). Neoliberalism in retrospect? - it's financialisation, stupid. Chang Kyung-Sup, Fine, Ben, and Weiss, Linda, eds, *Developmental Politics in Transitio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 Basingstoke/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im Hyun Mee (2011). The emergenc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and genderized citizenship in South Korea. Chang Kyung-Sup, and Turner, Bryan S.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 East Asia: Developmental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 Kong, Tat Yan (2011). Neoliberal restructuring in South Korea before and after the crisis. Chang Kyung-Sup, Fine, Ben, and Weiss, Linda, eds, *Developmental Politics in Transitio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 Basingstoke/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oo, Hagen (2001).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aslett, Barbara, and Brenner, Johanna (1989). Gender and social reproduction: Historical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381-404.
- Marx, Karl, and Engels, Frederick ([1945-46] 1970).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Ochiai, Emiko (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2): 219-245.
- Taylor-Gooby, Peter, ed.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urner, Bryan S. (2011). National and social citizenship: Some structural and cultural problems with modern citizenship. Chang Kyung-Sup, and Turner, Bryan S., eds,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Developmental Politics, National Unity, and Globaliz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Developmental State, Welfare State, Risk Family: Developmental Liberalism and Social Reproduction Crisis in South Korea

Chang, Kyung-Sup*

Approaching the family-centric nature of South Korea's social reproduction system as an element of the developmental liberal social policy regime, I argue that the widespread social reproduction crisis in recent years is epitomized by the rise of 'risk family'. This phenomenon is an outcome of the excessive public and private reliance on and/or exploitation of family as exacerbated by neoliberal social policies and trends. Considering two broad areas of social reproduction crisis - namely, material collapse and demographic impasse - I examine (and, if necessary, conceptualize) various critical social trends that constitute each of these areas. The recently activated political and academic debates should systematically reflect or include the serious efforts to overcome developmental liberalism and its ramifications in social reproduction crisis.

Key words: social reproduction, risk family, developmental liberalism, neoliberalism, welfare state

◆ 2011.07.11. 접수 / 2011.08.16. 1차 수정 / 2011.08.31. 게재 확정

*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changks@snu.ac.kr)